

#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 — 소비를 중심으로 —

Relative Deprivation in Consumption of Urban Poor Households in Korea

인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윤정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기춘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

Professor : Jung-Hai Yoo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ee-Choon Rhee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
| V.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 | VI. 결론     |
| 참고문헌            |            |

## 〈Abstract〉

Despite the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the economic inequality has been exacerbated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level of objective deprivation.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data on 602 households in the city of Incheon collected by the researcher through interviews. The major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the fou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the residential class was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determining the level of deprivation. For the entire sample, assets had stronger effect on the deprivation than nonasset income, but two variables ha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residential class. For the poor residential class, two variables had the effects. For the middle residential class, however, only the asset variable had significant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shows remarkable difference according to residential class, and that the inequality of wealth, compared to that of nonasset income, had much more serious effects.

## I. 문제의 제기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절대빈곤 문제보다는 상대빈곤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형평 차원의 논의이다.

가계복지는 모든 가계행동의 최종목적이다. 그리고 소비는 바로 가계복지의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도시빈곤가계의 소비수준은 가계복지의 실현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도시빈곤가계의 소비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으로는 상대적 박탈개념이 중요하다. 상대적 박탈개념은 머튼(Merton 1968(1957))과 런시만(Runciman 1966) 등에 의해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feelings of deprivation relative to others)'인 주관적 박탈개념으로 도입되었고, 그후 타운센드(Townsend 1979)는 개별가계의 생활수준이 국민전체의 평균생활수준에 객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보는 객관적 박탈개념이 주관적 박탈개념보다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해서 본 상대적인 박탈상태(conditions of deprivation relative to others)'인 객관적 박탈에 중점을 두어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이 초래한 빈곤현상의 결과를 객관적인 소비생활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생활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종래 서구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데세이와 샤프(Desai and Shah 1988)는 최근의 연구에서 소득이 박탈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님을 입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현황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평등한 반면(이준구 1989:315), 부의 분배현황은 토지의 지니계수가 0.9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불평등한 상

대에 있으므로(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1989) 우리사회에서 박탈을 결정하는 변수가 소득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1990년대의 한국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의 결정요인이 과연 비자산소득인가, 자산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들(거주지계층, 교육, 연령, 가계원수 등)인가를 실증 분석을 통해서 밝히려고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상대적 박탈

상대적 박탈개념은 18세기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그 사고의 싹이 움텄다. 스미스는 필수품은 관습에 의해 결정되고 관습은 사회규범을 의미하므로 관습 또는 사회규범이 박탈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Smith 1937(1776):821).

이러한 스미스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 타운센드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식료품, 의복, 주거, 가구집기, 작업, 환경, 거주 조건과 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고용, 직업, 교육, 오락, 가족의 활동과 관계, 사회의 활동과 관계에 참여 할 수 없을 때 박탈되었다"고 하였다(Townsend 1979:413). 반면 이러한 생활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때 빈곤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빈곤이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과 기타 자원에 따라 결정되지만, 박탈은 경험한 상태 또는 활동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Townsend et al. 1987:85).

### 2. 상대적 박탈의 조작적 정의

데이비스(Davis 1945: 2-3)에 의하면 소비수준은 "일정기간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한 비내구재, 내구재와 반내구재, 인간서비스의 총합"이다. 데이비

스는 소비의 개념을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 즉 유량으로서 정의했다. 또한 미국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유형화한 미첼(Mitchell 1983)은 소비유형을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유형과 소비행동(소유와 참여빈도)유형으로 구분했다. 미첼의 소비유형개념은 데이비스의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개념 외에 지량으로서의 소유 측면과 활동참여측면을 소비행동유형으로 고려하고 있다.

타운센드가 강조한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을 소비행동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면 유량으로서의 데이비스의 사용개념 외에 미첼의 소유와 참여개념이 포괄되어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비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을 “내구재·반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의 사용, 내구재·반내구재의 소유, 사회적 참여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식료품, 의류, 주거, 가구집기, 거주환경, 보건의료, 가족활동, 교육의 8개 소비범주에서 물질적 기준과 사회적 참여가 박탈된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 3. 상대적 박탈의 결정요인

상대적 박탈의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이론과 경험의 두 측면에서 객관적 박탈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첫째, 타운센드는 영국의 2,050 가계를 대상으로 1968년부터 1969년까지 60개 문항의 박탈지표를 사용하여 면접조사하여, 상대적 박탈개념을 객관적 측면에서 정교화시켰다. 그는 이 연구에서 “자원수준이 체감하면 사람들은 국민의 보편적 생활양식에 점점 덜 참여하게 될 것이다”는 가설을 세우고 자원과 박탈수준간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소득만을 중심으로 단순상관계수로써 설명하였다(Townsend 1979). 다음으로 런던 위켄드 텔레비전(LWT)은 1983년에 18세이상의 성인 1,17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고 누구나 구매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35개 항목을 필수품지표로 결정했다(Desai 1986:17). 마크와 랜스리(Mack & Lansley 1985)는 LWT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을 12단

계로 범주화시켜 소득 가변수로 변환시키고 박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여 박탈과 소득간에 우하향의 곡선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영국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전국조사는 소득을 중심으로 박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1980년대 중반이후 데세이와 샤(Desai & Shah 1988)는 타운센드의 1968/69년 조사자료를 보다 정교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박탈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자산, 교육, 가족 유형, 건강, 거주지역, 출신국가 등도 포함하여 박탈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소득과 박탈은 부(-)의 선형관계를 보였고, 자산이 중간정도일때 박탈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교육년수가 10년에서 11년으로 올라갈 때 박탈수준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노인단독가계가 가장 박탈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박탈개념으로 도시빈곤가계의 소비수준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학과 주거학 분야에서 계층별 생활양식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했다(홍두승·김미희 1988;백옥인 1991;허석렬 1991;박정희 1992).

이 논문에서는 자원이 상대적 박탈을 결정한다는 타운센드의 가설에 입각하여 상대적 박탈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즉 거주지계층, 비자산소득, 자산, 교육, 연령, 가계원수의 여섯 가지 지표가 상대적 박탈을 어떻게 결정하며 각각의 개별 지표와 상대적 박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했다.

#### (1) 거주지계층

최근 사회학에서는 보편적인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일정수준의 삶의 기회를 누리는”(홍두승·김미희 1988:492)것을 기준으로 계층집단을 중산층과 빈곤층(하류층)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빈곤층의 생활상태를 상대적 박탈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시빈곤층의 형성에 관한 허석렬(1991:312-313)의 연구는 도시빈민의 개념을 “무허가정착지나 슬럼

에 거주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끝없이 생계에 시달리는 사람들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도시빈곤층은 대부분 무허가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주택과 계층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1970년대 중반이후 대도시의 집합주거지역의 조성으로 계층별 거주지분리가 촉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기석 1980, 1982; 김인·박영규 1984; 홍두승·김미희 1988; 홍두승 1991; 박정희 1992). 즉 “대도시지역에서 주거수준의 격차가 계층간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한 거주지역도 부자와 빈자간에 뚜렷이 갈라져 나가고 있다는 분석과 예측들”(홍두승 1991:568)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본 계층개념인 거주지계층은 무허가정착지와 일반주거지역의 두 지역으로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대별되며 사회성원의 자원지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 (2) 비자산소득과 자산

### 가. 절대소득가설

케인즈는 소비의 크기는 실질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실질소득 이외에도 예비, 예측, 타산, 향상, 독립동기 등의 주관적 요인과 임금단위의 변화, 세계의 변화 등의 객관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다른 요인들은 변할 수 있으므로 실질소득 중에서도 임금단위로 측정된 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Keynes, 1973(1936) : 89-131).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일정불변일 때 실질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그의 논지를 살리면 그의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C = c(y) \quad (2-1)$$

C : 실질소비                      y : 실질소득

### 나. 생애주기가설

모딜리아니, 브람버그와 안도는 사람이 전생애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소비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애주기가설을 제시하였다(Ando and

Modigliani 1963; Modigliani and Brumberg 1955). 모딜리아니 등의 소비함수는 소비가 미래의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인 PV의 함수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들은 소득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PV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PV_t = a_t + \{1 + (n-t)b\} y_t^L \quad (2-2)$$

$a_t$  : 자산의 가격     $n$  : 수명     $t$  : 시점(기)

$b = y_t^L / \bar{y}_t^L$      $y_t^L$  : t기의 근로소득

$\bar{y}_t^L$  : 평균예상근로소득

식(2-2)의  $PV_t$ 로 소비함수를 나타내면

$$\begin{aligned} C_t &= kPV_t \\ &= ka_t + k\{1 + (n-t)b\}y_t^L \\ &= ka_t + k_2 y_t^L \quad \text{단, } k_2 = k\{1 + (n-t)b\} \end{aligned} \quad (2-3)$$

식(2-3)이 바로 모딜리아니 등의 소비함수이다. 이와같은 생애주기가설에 의한 소비함수는 첫째, 소비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자산을 설명변수로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으며, 둘째, 관찰이 용이한 근로소득이나 자산가치 등의 측면에서 소득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박탈의 결정요인으로 근로소득과 자산을 다함께 고려해야 한다.

## (3) 교육

인간자본이란 인간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간자원에 투입된 자본이다.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는 곧 인간자원에 대한 투자이다.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더 많은 인간자본을 지닌 노동자는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것이므로 기업가들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인간자본 축적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을 더 높은 임금의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이처럼 인간자본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투자량의 차이→노동생산성의 차이→임금 격차’라는 논리에 의해서 근로소득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Mincer 1974; Becker 1964; Schultz 1963).

이와같은 가계구성원에 투자된 인간자본은 학교교육, 직무훈련, 건강유지 및 증진의 새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Bryant 1991:170). 이중에서 인간자본의 투자가 가장 큰 학교교육은 계층에 따라 그 투자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계의 근로소득을 결정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4)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연령은 가족생애주기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생애주기가설은 “가계에서의 소득과 소비‘요구(needs)’가 생애주기와 관련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소비지출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Ando and Modigliani 1963:55).

먼저 소비요구의 생애주기측면을 고려해 보면 일반적으로 필수품의 소비요구는 교육의 전향목과 식료품, 의류, 보건의료, 가족활동의 일부소비를 제외하면 전생애에 걸쳐 대체로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지표는 주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료품 소비범주에서의 ‘우유나 요구르트’ 소비항목처럼 일부소비항목에서는 연령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의 생애주기측면을 고려해 보자. 소득은 현재의 근로소득, 예상근로소득, 자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연령은 주로 예상근로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예상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상대적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5) 가계원수

가계의 비자산소득과 자산이 일정불변일 때, 가계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전체의 소비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원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물적자원은 감소하며, 상대적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6) 기타변수

상대적 박탈을 결정하는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기타변수로는 취업상태, 직업, 건강, 가구주의 성(性),

가족유형, 가족취업유형 등의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다(Desai and Shah 1988; Mack and Lansley 1985; Mayer and Jencks 1988; Townsend 1987a).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건강, 가족유형, 가족취업유형 등의 변수는 조사되지 않았고, 가구주의 성은 여성가구주의 사례수가 적어서 분석에 적절하지 않았으며, 직업과 취업상태는 거주지계층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자원변수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변수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세웠다.

#### 1. 연구가설

H1.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 특성은 상대적 박탈수준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H1-1. 빈곤층의 박탈수준이 중산층의 박탈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다.

H1-2. 가계의 비자산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H1-3. 가계의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H1-4.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H1-5.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H1-6. 가계원수가 많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2. 연구모형

상대적 박탈수준은 거주지계층, 가계비자산소득, 가계자산, 가구주의 교육, 가구주의 연령, 가계원수의 함수이다. 박탈수준은 총박탈수준과 개별범주수준으로 측정되었다.

$$Y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e$$

Y : 박탈수준	X <sub>1</sub> : 거주지계층
X <sub>2</sub> : 비자산소득	X <sub>3</sub> : 자산
X <sub>4</sub> : 교육	X <sub>5</sub> : 연령
X <sub>6</sub> : 가계원수	e : 오차항

#### IV. 연구방법

##### 1. 자료

###### (1) 거주지계층의 조작적 정의

이 논문에서 필자는 거주지계층을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중산층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자산이 3,000만원"이상인 가계로서 인천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일정수준의 삶의 기회를 누리는 거주지계층군이다. 그리고 빈곤층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대상지구에 거주하고 자산이 3,000만원 미만인 가계로서 인천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이하의 삶의 기회를 누리는 거주지계층군이다".

###### (2) 표집설계

표본의 크기는 602가계이며,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율은 2:1로 한다. 빈곤층의 조사 모집단은 인천시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대상지구(1991.8)'에서 지정된 75개 지역이고, 75개 지역 중에서 다단계규모비례확률표집에 의해 20개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산층의 조사모집단은 인천시 '행정구별 중산층지구' 24개 지역이며, 24개 지역을 전부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가계는 계통표집방식으로 빈곤층의 400가계와 중산층의 202가계를 총 44개 조사대상지역에서 602가계를 추출하였다.

##### (3) 자료수집과정

빈곤층거주지와 중산층거주지의 주민, 시장환경, 지역환경에 대하여 탐색조사를 한 후, 1991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빈곤층의 30가계와 중산층의 30가계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10월 28일 부터 11월 24일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602부의 질문지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5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변수

###### (1) 종속변수

상대적 박탈지표는 타운센드(1987a)와 마크와 랜스리(1983)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탐색조사, 내용타당도검사, 예비조사를 거쳐 8개의 소비범주에서 5개의 소비항목씩 총 40개의 소비항목으로 상대적 박탈지표를 구성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소비항목의 박탈유무는 비박탈상태이면 0점, 박탈상태이면 1점을 주어 구했다. 각 소비범주의 박탈수준은 5개의 소비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0점부터 5점까지를 주었다.

총박탈수준을 구하기 전에, 거주환경은 대체로 주택가격에 평가되어 있으므로 총박탈수준을 구할 때만 8개의 소비범주 중에서 거주환경은 주거에 포함시켜 W주거로 단일화하였다. 그 다음에 각 소비범주의 박탈수준의 점수를 표준화시키고, 1991년 7월 현재의 노총의 표준생계비모형(노총 1992)을 참조하여,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8대 소비지출비목 중에서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7대 소비지출비목의 소비지출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합산하여 총박탈수준을 구했다. 그리고 총박탈 수준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 소비범주를 제외할 때에는 총박탈 I 수준으로, 교육 소비범주를 포함할 때에는 총박탈 II 수준으로 그 점수를 구했다.<sup>2)</sup>

1) 토지공개념 연구보고서(1989)에 의하면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자산이 1억원이므로 우리나라 평균자산의 30%선을 부가기준으로 적용한다.

2) 총박탈 I 수준 = W식료품+W의류+W주거+W가구집기+W보건의료+W가족활동

## (2) 독립변수

이 논문에 포함된 상대적 박탈의 주요 결정요인은 거주지계층, 비자산소득, 자산, 가구주의 교육, 가구주의 연령, 가계원수이다. 거주지계층은 빈곤층과 중산층의 두 계층으로 하고 중산층을 기준점(중산층=0)으로 하였다. 비자산소득은 총가계소득에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값이며 상위 6.6%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은 300만원으로 상한부호화하였고 자산은 총가계자산이며 역시 상위 4.8%에 해당하는 4억원 이상은 4억원으로 상한부호화하였다.<sup>9)</sup> 그리고 연령은 가구주의 만연령이며 교육은 가구주의 평균교육연수이다. 가계원수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하는 부모와 미혼자녀의 수이다.

## 3.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OLS방법을 사용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OLS 추정치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규분포, 동분산성, 선형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먼저 정규분포의 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잔차의 막대그림을 그려 보았으며, 동분산성(homoskedasticity)가정과 선형성(linearity)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잔차의 산포도를 그려 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위의 가정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를 구해 보았다. 분산팽창요인지수의 값이 전부 2미만이었으며 상태지수는 전부 30미만으로 대체로 다중공선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Kennedy 1985: 153). 따라서 연구가설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V.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

### 1.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특성

먼저 조사대상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 특성을 거주지계층별로 <표 2>에서 살펴 보겠다. 빈곤층가계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중산층의 약 3분의 1 정도로서 76만원이었다. 빈곤층의 총가계자산은 중산층의 약 22분의 1 정도로서 1,200만원이다. 총가계부채를 비교해 보면 중산층의 총가계부채가 빈곤층의 그것보다 더 크며 평균적으로 빈곤층의 10배정도 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빈곤층은 금융부채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가계자산에서 총가계부채를 뺀 순가계자산으로 비교해 보면 중산층의 순가계자산이 빈곤층의

$$\text{총박탈 II 수준} = W\text{식료품} + W\text{의류} + W\text{주거} + W\text{가구집기} + W\text{보건의료} + W\text{가족활동} + W\text{교육}$$

$$W\text{식료품} = Z\text{식료품}^a \times 38.6^b$$

$$W\text{의류} = Z\text{의류} \times 6.9$$

$$W\text{주거} = Z(\text{주거} + \text{거주환경}) \times 28.2$$

$$W\text{가구집기} = Z\text{가구집기} \times 4.1$$

$$W\text{보건의료} = Z\text{보건의료} \times 6.5$$

$$W\text{가족활동} = Z\text{가족활동} \times 6.7$$

$$W\text{교육} = Z\text{교육} \times 9.0$$

a. Z식료품 : 식료품의 표준화된 점수임.

b. 1991년도 7월 현재 노총의 표준생계비모형 중 비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7 대소비지출항목의 소비지출 비중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준 값임.

- 3) 이와같은 방법으로 상한부호화하지 않으면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경우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상위 5% 내외에 해당하는 소수가계의 근로소득과 자산의 값이 회귀식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자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소비행동유형은 대체로 유사하며 자산이 4억원 이상인 가계도 소비행동유형이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상대적 박탈 지표(Relative Deprivation Index)

소비범주	소 비 항 목
식료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밥은 주로 일반미로 해 먹지 못함</li> <li>2. 우유나 요거트를 매일 먹지는 못함</li> <li>3. 거의 매일은 과일을 먹지 못함</li> <li>4. 하루 한번정도도 고기나 생선을 못 먹음</li> <li>5. 지난 1년동안 생활비부족으로 끼니를 기른 적 있음</li> </ol>
의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른들이 겹혼식 등에 입고 갈 만한 외출복이 없음</li> <li>2. 추위에 입을 만한 코트나 오리털 파카가 없음</li> <li>3. 가족수대로 갈아입을 추동내이가 두 벌 이상 없음</li> <li>4. 가족들의 양말은 주로 유명 메이커 제품이 아님</li> <li>5. 가족들의 운동화나 구두는 유명 메이커 제품이 아님</li> </ol>
주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 화장실이 없음</li> <li>2. 부엌에 상하수도시설이 없음</li> <li>3. 기름 또는 가스 난방이 아님</li> <li>4. 집에 비가 새거나 습기가 참</li> <li>5. 만 5세 이상가족 2인당 방 한칸이 안됨</li> </ol>
가구집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탁기 없음</li> <li>2. 냉장고 없음</li> <li>3. 가스레인지 없음</li> <li>4. 장농 없음</li> <li>5. 책상과 의자 없음</li> </ol>
거주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네가 강도, 강간, 도둑때문에 안전하지 못함</li> <li>2. 하천이나 하수처리 미비로 심한 악취가 남</li> <li>3. 집앞까지 길이 포장되어있지 않고 택시가 들어올 수 없음</li> <li>4. 정가보다 싸게 파는 슈퍼마켓이 걸을 만한 거리에 없음</li> <li>5.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이 없음</li> </ol>
보건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치나 틀니 등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함</li> <li>2. 가족중 만성환자가 1인 이상 있음</li> <li>3. 몸이 아플 경우 병원보다는 주로 약국에 감</li> <li>4. 건강을 위해 탁구, 테니스, 등산 등의 운동을 못함</li> <li>5. 아무런 운동기구나 등산용구가 없음</li> </ol>
가족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난 석달동안 손님초대한 적이 없음</li> <li>2. 지난 석달동안 가족여행이나 소풍간 적이 없음</li> <li>3. 신문 구독 안함</li> <li>4. 전축, 오디오 없음</li> <li>5. 사진기 없음</li> </ol>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난 6개월동안 학비, 학원비, 유치원비 등을 못냄</li> <li>2. 전과, 수련장 이외의 학습참고서, 교양도서 없음</li> <li>3. 지난 1년동안 유치원, 학원, 개인과의 시키지 못함</li> <li>4. 지난 1년 동안 학교, 유치원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함</li> <li>5. 지난 1년간 학습지 구독한 적이 없음</li> </ol>

〈표 2〉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계층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 특성

소비영역(단위)	전체(N=563)	빈곤층(N=380)	중산층(N=183)
	평균(SD)	평균(SD)	평균(SD)
총가계소득(천원)	1,269 (1,387)	760 (396)	2,325 (1,988)
총가계자산(백만원)	94 (287)	12 (9)	264 (459)
총가계부채(백만원)	4 (13)	1 (3)	10 (22)
순가계자산(백만원)	90 (284)	11 (9)	254 (458)
가구주 교육연수(년)	10.5 (4.3)	8.8 (3.8)	14.0 (2.7)
가구주 연령	43.7 (11.1)	44.0 (11.9)	43.1 (9.2)
가계원수	3.8 (1.1)	3.6 (1.1)	4.2 (.9)

〈표 3〉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계층별 상대적 박탈수준

소비범주	전체(N=563)	빈곤층(N=380)	중산층(N=183)	격 차
	평균(SD)	평균(SD)	평균(SD)	
총박탈수준 I	.02 (.77)	.44 (.50)	-.86 (.40)	1.30
총박탈수준 II	-.06 (.83)	.42 (.54)	-.97 (.41)	1.17
식료품	1.89 (1.23)	2.43 (.97)	.77 (.93)	1.66
의류	2.07 (1.51)	2.77 (1.26)	.62 (.78)	2.15
주거	1.72 (1.44)	2.49 (1.07)	.11 (.42)	2.38
가구집기	.71 (.95)	.99 (1.02)	.12 (.33)	.87
거주환경	1.51 (1.36)	2.01 (1.31)	.49 (.78)	1.52
보건의료	2.58 (1.32)	3.13 (1.04)	1.43 (1.09)	1.70
가족활동	2.31 (1.69)	3.11 (1.36)	.64 (.90)	2.47
교육	1.85 (1.39)	2.38 (1.29)	.82 (.90)	1.56

2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교육연수는 전체가계가 10.5년으로 평균적으로 고졸되 또는 고졸 수준이었다. 중산층의 평균교육연수는 14.0년으로 절반이상이 전문대졸이상이고 빈곤층은 평균교육연수가 8.8년이며 90%정도가 고졸이하이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4세이었으며, 빈곤층에서는 60세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중산층에 비해 높은 점이 특징이었다.

평균가계원수는 3.8명이었고 중산층은 4.2명으로서 빈곤층의 3.6명보다 평균가계원수가 더 높았다. 이것은 빈곤층에서 노인단독가계, 모자가계, 편조부모손자녀가계 등의 결손가족의 유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계층별 상대적 박탈수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거주지계층별 상대적 박탈수준이므로 필자는 우선 거주지계층별로 박탈수준이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표 3〉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거주지계층별로 상대적 박탈수준을 살펴보면, 첫째, 총박탈수준과 소비범주수준에서 모두 빈곤층의 박탈수준이 중산층의 박탈수준보다 높았다. 둘째, 거주지계층별로 각 소비범주의 박탈수준을 비교해 보면, 빈곤층은 가구집기를 제외한 전 소비범주에서 두 소비항목 이상이 박탈되어 있었다. 특히 가족활동과 보건의료는 세 소비항목 이상이 박탈되어 있을 정도

로 박탈수준이 가장 높은 소비범주들이었다. 반면에 중산층은 보건의료를 제외한 전 소비범주에서 한 소비항목 미만이 박탈되어 있고 주거와 가구집기의 두 소비범주는 거의 비박탈상태에 있었다. 셋째, 빈곤층과 중산층의 격차를 살펴 보면 격차가 2 이상으로 큰 소비범주 들은 가족활동, 주거, 의류이었고 그 격차가 1 미만으로 작은 소비범주는 가구집기이었으며 기타 소비범주들은 그 격차가 중간 정도로서 1 이상 2 미만이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빈곤층과 중산층에서 모두 박탈이 큰 소비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질병치료와 건강유지의 두 측면에서 보건의료소비범주의 척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과 운동기구 등의 소비항목은 중산층과 빈곤층에서 모두 필수적이지 아니기 때문이었다.

### 3. 상대적 박탈수준의 결정요인

#### (1) 상대적 총박탈수준의 결정요인

우선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두 변수에 대해서만 총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를 <표 4-1>에 제시하였고 6개의 독립변수 전체에 대한 총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를 <표 4-2>와 <표 4-3>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가계의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두 변수의 효과만을 <표 4-1>에서 비교해 보면, 총박탈수준 I 과 총박탈수준 II에 있어서 모두 자산효과( $R^2$ 변화

량=.082;.106)가 비자산소득효과( $R^2$ 변화량=.073;.048)보다 크게 나타났다.<sup>4)</sup>

다음으로 비자산소득, 자산, 거주지계층, 교육, 연령, 가계원수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2>와 <표 4-3>과 같다.<sup>5)</sup>

첫째, 총박탈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전체가계에서 거주지계층에 따라 비자산소득효과와 자산효과가 모두 달라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q.1에 비자산소득과 거주지계층, 자산과 거주지계층의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Eq.4의 설명력은 총박탈수준 I에서 2.1%, 총박탈수준 II에서 2.5% 정도 증가하였다.

둘째,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여 비자산소득효과와 자산효과 크기를  $R^2$ 감소분으로 비교해 보면, 빈곤층에서 자산효과와 비자산소득효과가 모두 존재했지만 중산층에서는 비자산효과만 있었고 자산효과만 있었다.

셋째, 거주지계층, 비자산소득, 자산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Eq.4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박탈수준은 높아졌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박탈수준은 낮아졌다. 그러나 가계원수는 박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가계에서 총박탈수준에 대한 비자산소

4)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를  $R^2$  변화량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3단계의 회귀분석을 했다. Eq.1을 기준으로 하여 Eq.2의  $R^2$  감소분은 비자산 소득효과를 나타내며, Eq.3의  $R^2$  감소분은 자산효과를 나타낸다.

5) 상대적 박탈수준의 결정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론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가계에 대한 4단계의 회귀분석(four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거주지계층에 따라 비자산소득효과 또는 자산효과가 달라지는가를 파악했다.

만일 단 하나의 거주지계층과의 상호작용효과라도 발견되면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거주지계층에 따라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주지계층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으면 다시 전체가계만을 대상으로, 거주지계층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면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여 빈곤층과 중산층 각각을 대상으로, 3단계의 회귀분석을 했다. 그 목적은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를  $R^2$  변화량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교육, 연령, 가계원수의 효과는 전체가계의 회귀식으로 분석했다. 비자산소득과 거주지계층, 자산과 거주지계층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으면 전체가계의 Eq.1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경우, 비자산소득과 거주지계층의 상호작용 효과만 있으면 Eq.2를 기준으로, 자산과 거주지계층의 상호작용효과만 있으면 Eq.3을 기준으로, 두가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있으면 Eq.4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표 4-1〉 상대적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총박탈수준 I, II)

(N=563)

총 박 탈 수 준 I			
	Eq.1	Eq.2	Eq.3
	b ( $\beta$ )	b ( $\beta$ )	b ( $\beta$ )
비자산소득	-.398 (-.379)**		-.691 (-.658)**
자산	-.029 (-.399)**	-.048 (-.665)**	
상수	.631	.322	.761
수정 R <sup>2</sup>	.513	.441	.432
R <sup>2</sup>	.515	.442	.434
R <sup>2</sup> 감소분 <sup>a</sup>		.073**	.081**

  

총 박 탈 수 준 II			
	Eq.1	Eq.2	Eq.3
	b ( $\beta$ )	b ( $\beta$ )	b ( $\beta$ )
비자산소득	-.354 (-.311)**		-.725 (-.636)**
자산	-.035 (-.461)**	-.052 (-.680)**	
상수	.608	.304	.797
수정 R <sup>2</sup>	.508	.460	.403
R <sup>2</sup>	.511	.462	.404
R <sup>2</sup> 감소분 <sup>a</sup>		.048**	.106**

\* p<.05 \*\* p<.01

a : R<sup>2</sup> 감소분은 Eq.1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화량임.

득과 자산의 효과를 비교하면 자산효과가 비자산소득효과보다 더 큰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부의 불평등도가 비자산소득의 불평등도 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거주지계층을 통제하면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달라지는 결과는 빈곤층과 중산층이라는 뚜렷한 거주지계층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교육이 총박탈수준에 부의 효과를 보인 것은 교육이 박탈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인간자본임을 의미한다.

넷째, 연령은 총박탈수준에 정(+ )의 효과를 보인 것은, 연령이 가족생애주기의 대리변수로서, 노년기의 경우는 남은 생애가 짧기 때문에 미래의 예상근로소득이 작아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계일수록 총박탈수준이 높게 나온 것이다.

다섯째, 가계원수가 총박탈수준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은 가계원수가 동일하더라도 가족생애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라 가계의 취업자수와 비취업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애주기와 가족유형 등의 변수를 통제해야 가계원수가 총박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소비범주별 상대적 박탈수준의 결정요인

전체가계의 6개 독립변수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소비범주별로 요약한 결과(1)과 전체가계와 빈곤층, 중산층의 비자산소득효과와 자산효과만을 R<sup>2</sup> 변화량으로 비교한 결과(2)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2)의 전체가계의 경우는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두 변수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요약이며 빈곤층과 중산층의 경우는 거주지계층을 통제했을 때의 5개 독립변수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요약이다.

첫째, 전체가계에서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만을 소비범주별로 비교해보면 주거, 식료품, 거주환경, 교육의 네 소비범주에서는 자산효과가 비자산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왔다. 그러나 가족활동, 의료, 보건의료의 세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가 자산효과보다 더 크게 나왔다. 그리고 가구집기에서는 비

〈표 4-2〉 상대적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 (총박탈수준 I<sup>a</sup>)

	Eq.1	Eq.2	Eq.3	Eq.4
	$\beta$	$\beta$	$\beta$	$\beta$
<u>전체가계(N=563)</u>				
거주지계층	.520**	.727**	.635**	.794**
연 령	.086**	.060*	.099**	.077**
교 육	-.197**	-.194**	-.192**	-.190**
가계원수	-.005	.021	.026	.043
근로소득	-.117*	.001	-.115**	-.019
자 산	-.096*	-.140**	-.085*	-.122**
비자산소득×거주지계층		-.203**		-.168**
자산×거주지계층			-.159*	-.143**
수정 R <sup>2</sup>	.695	.703	.709	.715
R <sup>2</sup>	.698	.707	.713	.719
R <sup>2</sup> 증가분 <sup>b</sup>		.009**	.015**	.021**
<u>빈곤층(N=380)</u>				
연 령	.137*	.169**	.084	
교 육	-.289**	-.326**	-.306**	
가계원수	.147**	.072	.084	
비자산소득	-.241**		-.269**	
자 산	-.247**	-.271**		
수정 R <sup>2</sup>	.289	.246	.236	
R <sup>2</sup>	.298	.254	.244	
R <sup>2</sup> 감소분 <sup>b</sup>		.044**	.054**	
<u>중산층(N=183)</u>				
연 령	.131	.125	.090	
교 육	-.149	-.153*	-.184**	
가계원수	-.123	.124	-.132	
비자산소득	-.023		-.124	
자 산	-.265**	-.273**		
수정 R <sup>2</sup>	.117	.121	.068	
R <sup>2</sup>	.141	.141	.088	
R <sup>2</sup> 감소분 <sup>b</sup>		.000	.053**	

\*p&lt;.05 \*\*p&lt;.01

a : 총박탈수준 I 은 교육소비범주를 제외한 6개 소비범주의 박탈수준을 표준화 시킨후 가중합산한 것임.

b : R<sup>2</sup> 증가분과 감소분은 Eq.1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화량임.

(표 4-3) 상대적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 (총박탈수준 II<sup>a</sup>)

	Eq.1 $\beta$	Eq.2 $\beta$	Eq.3 $\beta$	Eq.4 $\beta$
<u>전체가계(N=563)</u>				
거주지계층	.568**	.812**	.683**	.901**
연 령	.096**	.088**	.106**	.097**
교 육	-.184**	-.183**	-.184**	-.182**
가계원수	.028	.037	.043	.050
비자산소득	-.119**	.024	-.126**	.008
자 산	-.066*	-.125*	-.046	-.102
비자산소득×거주지 계층		-.239**		-.221**
자산×거주지계층			-.158**	-.148**
수정 R <sup>2</sup>	.690	.701	.703	.713
R <sup>2</sup>	.695	.708	.709	.720
R <sup>2</sup> 증가분 <sup>b</sup>		.013**	.014**	.025**
<u>빈곤층(N=380)</u>				
연 령	.141*	.142*	.108	
교 육	-.260**	-.293**	-.272**	
가계원수	.163**	.115	.129*	
비자산소득	-.266**		-.271**	
자 산	-.241**	-.245**		
수정 R <sup>2</sup>	.245	.181	.192	
R <sup>2</sup>	.263	.196	.207	
R <sup>2</sup> 감소분 <sup>b</sup>		.067**	.056**	
<u>중산층(N=183)</u>				
연 령	.266**	.261**	.205*	
교 육	-.160	-.156	-.229*	
가계원수	-.145	-.142	-.123	
비자산소득	.031		-.069	
자 산	-.266*	-.254**		
수정 R <sup>2</sup>	.135	.142	.091	
R <sup>2</sup>	.173	.172	.123	
R <sup>2</sup> 감소분 <sup>b</sup>		.001	.050**	

\*p<.05 \*\*p<.01

a : 총박탈수준 II는 교육소비법주를 제외한 7개 소비법주의 박탈수준을 표준화시킨후 가중합산한 것임.

b : R<sup>2</sup> 증가분과 감소분은 Eq.1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화량임.

〈표 5〉 소비범주별 상대적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 요약

		(1) 전 체 가 계 <sup>a</sup>		(2) 소득 <sup>b</sup> 효과와 자산효과와의 비교(R <sup>2</sup> 변화량)			
		인구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지위	전체가계 <sup>c</sup> (N=563)	빈곤층 <sup>d</sup> (N=380)	중산층 <sup>d</sup> (N=183)	
				소득 자산	소득 자산	소득 자산	
식 료 품	연령(+)	교육(-)		.047 < .054			
	가계원수(NS)	자산(-)	소득×거주지계층		.019 > .010	NS	.041
의 류	가계원수(+)	교육(-)		.073 > .037			
	연령 (NS)	소득×거주지계층	자산(NS)		.033	NS	NS
주 거	가계원수(+)	교육(-)		.039 < .093			
	연령 (NS)	자산×거주지계층	소득(NS)		NS	.137	NS
가구집기	가계원수(-)	교육(-)		.090 NS			
	연령 (NS)	소득×거주지계층	자산×거주지계층		.033 > .032		NS
보건의료	연령 (NS)	교육(-)		.055 > .050			
	가계원수(NS)	자산(-)	소득×거주지계층		.046 > .014		NS
가족활동	연령(+)	교육(-)		.098 > .036			
	가계원수(NS)	자산×거주지계층	소득×거주지계층		.025 < .049		NS
거주환경		거주지계층(+)		.025 < .036			
	가계원수(+)	소득(-)	교육(NS)				
교 육	연령(-)	자산(NS)					
	연령(+)	거주지계층(+)		.033 < .041			
교 육	연령(+)	교육(-)					
	가계원수(NS)	자산(NS)	소득(NS)				

a : 6개 독립변수에 대한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임.

b : 〈표 5〉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의미함.

c : 근로소득과 자산에 대한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임.

d : 거주지계층을 제외한 5개 독립변수에 대한 박탈수준의 중회귀분석결과임.

자산소득효과만 유의하였다.

둘째, 전체가계에서 거주환경과 교육의 두 소비범주에서는 거주지계층의 독립효과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섯 소비범주에서는 거주지계층에 따라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식료품, 의류, 보건의료의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가 중산층에서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주거소비범주에서는 자산효과가 중산층에서 약간 감

소했다. 가구집기와 가족활동의 두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와 자산효과가 모두 중산층에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여 비자산소득과 자산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빈곤층에서 주거 소비범주에서는 자산효과만 유의하였으며 의료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만 유의했고 식료품과 보건의료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가 자산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집기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거의 비슷했으며 가족활동 소비범주에서는 자산효과가 비자산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산층에서는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소비범주에서만 자산효과가 유의했으며 다른 소비범주에서는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거주환경을 제외한 일곱 소비범주의 박탈수준에 부(-)의 효과가 있었다.

넷째, 가구주의 연령은 식료품, 가족환경, 교육의 세 소비범주에서는 정(+)의 효과가 있었으며 거주환경에서는 부(-)의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가계원수는 의류와 주거의 두 소비범주에서는 정(+)의 효과가 있었으며 가구집기 소비범주에는 부(-)의 효과가 있었다.

#### 4. 연구가설의 검증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세운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대적 박탈수준에서 거주지계층은 전반적으로 비자산소득 또는 자산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거주환경과 교육 소비범주에서는 독립효과가 유의했다. 따라서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둘째,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지 않고 비자산소득효과를 살펴보면 비자산소득효과는 총박탈수준과 전소비범주수준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가설 H1-2는 지지되었다. 셋째,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지 않고 자산효과를 살펴보면 자산효과는 총박탈수준과 가구집기외의 전소비범주수준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가설 H1-3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교육은 총박탈수준과 거주환경외의 전소비범주수준에서 부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H1-4는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섯째, 연령은 총박탈수준과 식료품, 가족활동, 교육 소비범주에서 정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거주환경 소비범주에서는 부의 효과가 유의했다. 따라서 H1-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섯째, 가계원수는 의류와 주거 소비범주에서는 정의 효과가 유의했으나 가구집기 소비범주에서는 부의 효과가 유의했다. 그리고 총박탈수준과 기타 소비범주에서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1-6은 의류와 주거 소비범주에서만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학적 특성은 상대적 박탈수준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가설 H1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행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두 변수가 상대적 총박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거주지계층을 통제하지 않고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자산효과가 비자산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산(부)의 불평등도가 비자산소득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심각하며 자산이 소비생활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거주지계층은 상대적 총박탈수준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특히 거주지계층에 따라 비자산소득과 자산의 효과가 달라지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빈곤층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와 자산효과가 모두 존재했지만 중산층에서는 비자산소득효과는 전혀 없었고 자산효과만 존재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사회의 소비생활수준이 빈곤층과 중산층이라는 거주지계층으로 구획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산층에서 비자산소득효과는 전혀 없고 자산효과만이 있음은 그들에게 근로동기를 부여하기 보다는 불로소득만을 추구하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상대적 총박탈수준에서 교육은 부의 효과가 유의했고 연령은 정의 효과가 유의했으며 가계원수

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교육은 박탈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인간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박탈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노인가계의 복지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계 원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취업원수, 가족 유형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상대적 박탈수준의 결정요인을 소비범주별로 비교해보면 주거, 식료품, 거주환경, 교육의 네 소비범주에서는 자산효과가 비자산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과 거주환경은 거주지계층의 효과가 뚜렷했다. 그리고 다른 여섯 소비범주에서 모두 중산층의 경우 비자산소득효과가 없어졌다. 이로부터 주거와 거주환경, 식료품, 교육이 자산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이 심각한 소비범주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근거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을 완화시키려면 자본이득의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며, 주택과 택지공급을 증대시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취업층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노동생산성상승률 수준으로 임금인상률을 보장하여 빈곤가계가 주거의 안정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도시빈곤가계의 소비범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박탈이 심각한 주거박탈, 식료품박탈, 교육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1) 무허가정착지 주거의 양성화,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무담보장기저리 융자제도 등의 주택 및 금융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2) 식료품박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지출비중이 가장 큰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3) 도시빈곤가계는 사교육의 박탈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어 빈곤층 뿐만아니라

중산층도 포함한 전체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 인 · 박영규(1984). 주택의 소유관계와 거주지 공간 분화 현상:서울을 사례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6(2):117-151.
- 2) 김태동 · 이근식(1989). 땅 :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 한국 토지분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경실련>문고1. 비봉.
- 3) 박정희(1992). 도시 주거계층 연구:분석모형의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백옥인(1991). 계급, 계층별 생활양식.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회편, 사회계층 -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550-566.
- 5) 이기석(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128-172.
- 6) 이기석(1982). 주택건설과 도시내 지역분화: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42:109-118.
- 7) 이정우 · 조우현(1991). 임금과 근로자생활.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논문.
- 8) 이준구(1989). 소득분배의 이론과 실제. 다산.
- 9)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1989).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2). 한국노동자의 생활실태. 정책연구, 4(2월호).
- 11) 허석렬(1991).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재생산.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 이론과 실제, 다산, 310-320.
- 12) 홍두승(1991 a). 계층의 공간적 분화 1975-1985:서울시의 경우.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 이론과 실제, 다산, 567-583.
- 13) 홍두승 · 김미희(1988).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공논총, 19, 485-533.
- 14) Ando, A. and F. Modigliani(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55-84.

- 15) Becker, G. S.(1964). *Human Capital-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 16) Bryant, K.(1991).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7) Davis, J. S.(1945). "Standards and Contents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1): 1-15.
- 18) Desai, M.(1986). Drawing the Line : "On Defining the Poverty Threshold." Pp. 1-20 in *Excluding the Poor*, edited by P. Golding. London : Child Poverty Action Group.
- 19) Desai, A., and A. Shah.(1988). "An Econometric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Oxford Economic Papers* 40: 505-522.
- 20) Kennedy, P.(1985). *A Guide to Econometrics*(2nd ed.). Cambridge : The MIT Press.
- 21) Keynes, J. M.(【1936】1973).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Macmillan.
- 22) Mack, J., and S. Lansley.(1985). *Poor Britain*. London : George Allyn and Unwin.
- 23) Mayer, S. E., and C. Jencks.(1988). "Poverty and the Distribution of Material Hardship."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1):88-114.
- 24) Merton, R. D., and A. S. Rossi.(【1957】1968).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Reference Group Behavior." Pp. 279-334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arged ed.), edited by R. K. Merton. New York : Free Press.
- 25)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 26) Mitchell, A.(1983). *The Nine American Lifestyles*. New York:McMillan.
- 27) Modigliani, F., and E. Tarantelli(1975). "The Consumption Function in a Developing Economy and the Italian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65(5): 825 -842.
- 28) Modigliani, F., and R. E. Brumberg(1955).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in *Post-Keynesian Economics*, edited by K. K. Kurihara. London:George Allen and Unwin.
- 29) Pearce, D. W.(1986). *The MIT Dictionary of Modern Economics* (3rd ed.). Cambridge : The MIT Press.
- 30) Runciman, W. G.(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31) Schultz, T. W.(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32) Smith, A.(【1776】1937).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 The Modern Library.
- 33)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 of Living*.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34) Townsend, P.(1987).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16 (2): 125-146.
- 35) Townsend, P., P. Corrigan, and U. Kowarzik (1987). "Deprivation." Pp.85-94 in *Poverty & Labour in London*. London: The Low Pay Unit.
- 36) Townsend, P., and D. Gordon(1981), What is enough:New evidence on poverty allowing the definition of a minimum benefi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Sociology of Social Security*. University of Edinburgh, 4-6, July.